
 국토교통부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배포일시	2021. 6. 16.(수) /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건축안전과	담당자	· 과장 오진수, 사무관 최민중, 사무관 이지형, 주무관 노운용, 주무관 정연수 · ☎ (044) 201-4986, 4985, 4986, 4991
	건설안전과		· 과장 한명희, 사무관 유연형 · ☎ (044) 201-3573, 4593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## 국토부,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점검 대책회의 개최

- 17개 시도·부단체장과 회의 갖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 강조
- 1차관 주재 건설안전협의회에서도 건축물 해체공사 점검강화 지시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광주 동구 붕괴사고의 후속조치로 지난 6월 11일 전국 지자체에 모든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점검을 요청하였고, 위험도가 높은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6월 14일부터 정부·지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.
  - 이와 관련하여, 16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(정동)에서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17개 시·도 부단체장과 함께 전국의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점검 현황을 보고받고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의 자리를 가졌다.
- 국토교통부는 정부·지자체 합동점검이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완료 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, 지자체별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서 자체 안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여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  - 특히, 재개발·재건축 해체공사 현장, 대로변에 인접한 공사장은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고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는 경우에는 버스정류장 이전 조치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,

- 안전 확인 후 재개되는 공사현장 및 신규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.
- 국토교통부는 앞선 15일에도 지자체와 실무회의를 실시하고, 해체 계획서 검토, 공사감리, 해체기술·시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(TF)을 구성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, 제도적 보완사항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은 “이번 광주 붕괴사고와 같은 인명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리·감독을 강화하고자 한다”면서,
  - “특히, 15일 법안 소위에서 「건축물관리법」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공사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”된다면서, “건축물 해체공사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- 한편, 윤성원 1차관은 16일 오후 2시 30분 ‘21년 상반기 중앙 건설 안전협의회\*를 주재하면서도, 최근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지자체와 합동으로 도로에 인접하거나, 고층의 건축물 해체공사 등 위험현장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문하였다.

\* '17년 2월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구성한 민관 합동 협의체로 국토부 제1차관을 비롯, 정부위원(행정안전부, 고용노동부) 및 국토부 산하 소속기관, 업계, 노동조합, 학계 소속의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